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폴란드

Republic of Poland

2020년4월9일 | 책임조사역(G3) 박지현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동향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면적 313천 km ² 	인구 3,797만 명 (2019년) 	정치체제 이원집정부제 	대외정책 독자적 실리노선 
GDP 5,659억 달러 (2019년) 	1인당GDP 14,902달러 (2019년) 	통화단위 Zloty (Zl) 	환율(US\$기준) 3.84 (2019년) 

- 유럽 중동부에 위치한 폴란드는 독일, 체코,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리투아니아, 러시아와 접경하고 있음. 서유럽과의 접근성이 좋은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자동차 산업 등에서 역내 제조업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폴란드 경제는 2004년 EU 가입 이후 회원국과의 교역 확대, EU 기금 지원, 정부의 복지정책, 내수 시장 활성화 등으로 28년 연속 플러스 경제성장을 시현 중이며, 2019년에도 정부의 경기부양책, 가계소득 및 소비 증가, 탄탄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4%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15년부터 집권 중인 법과정의당은 민족주의 및 보수주의적인 성향을 띠고 있음. 2019년 10월 총선에서 상원 의석의 13석을 상실하여 과반수 확보에는 실패하였으나 하원의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며, 상원에서도 최다 의석을 유지하고 있어 2024년 총선까지 정치적 안정성이 비교적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 법과정의당의 사법개혁 추진으로 EU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으며, 러시아와도 크림 반도 사태 이후 관계가 급격히 경색됨. 한편, 미국과는 군사 및 에너지 안보를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89. 11. 1 수교 (북한과는 1948. 10. 16)

주요협정

투자증진·보호협정('90), 항공협정('92), 이중과세방지협약('92), 사증면제교환각서('93), 문화협정('94), 과학·기술협력협정('94), 운전면허상호인정·교환협정('99), 세관협력·공조협정('00), 경제협력협정('05), 관광협력협정('05), 사회보장협정('10),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10), 국방협력협정('14), 취업관광 프로그램협정('18)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17	2018	2019	주요품목
수출	3,116,364	4,333,707	5,314,955	평판 디스플레이·센서, 건전자축전지, 자동차 부품
수입	628,246	673,268	771,113	자동차 부품, 기타금속광물, 산업용 전자기기

해외직접투자현황('19년 말 누계, 총투자기준) 신규법인 수 275건, 3,393,346천달러

국내경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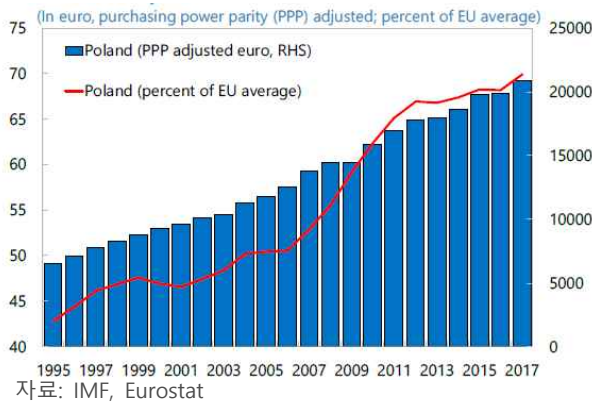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경제성장률	3.8	3.1	4.9	5.1	4.0
소비자물가상승률	-0.9	-0.6	2.0	1.6	2.4
재정수지/GDP	-2.7	-2.2	-1.5	-0.4	-1.5

자료: IMF, EI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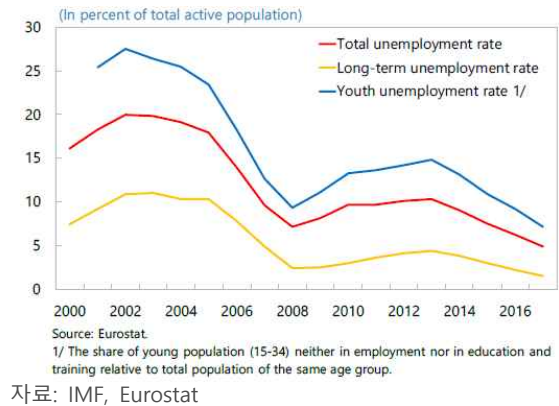
2004년 EU 가입 이후 견조한 경제성장세 지속

- 폴란드 경제는 2004년 EU에 가입한 이후 EU 회원국들과의 교역 확대, EU 기금으로부터의 지원, 정부의 대규모 사회보장 지원정책 등으로 28년 연속 플러스 성장을 시현 중임. 특히, 임금 상승과 실업률 하락으로 가계소득이 증가하여 내수를 중심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 중임.

연도별 1인당 GDP (% , 유로)



연도별 실업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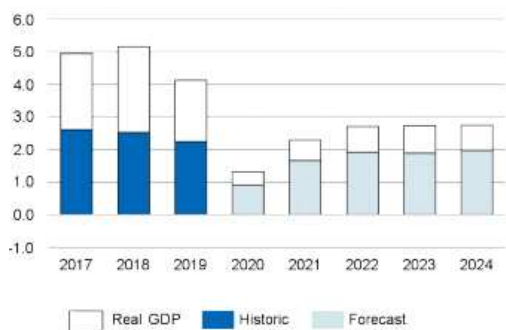


탄탄한 내수시장에 힘입어 2019년 4.0%의 경제성장 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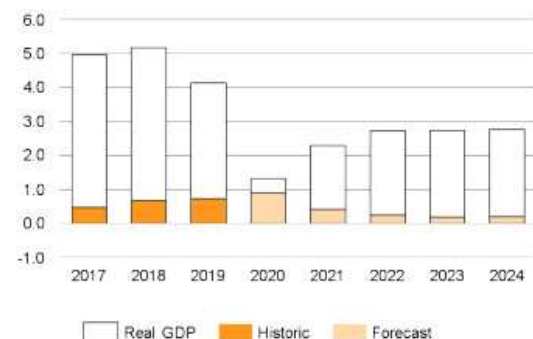
- 2019년 폴란드 경제는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보조금 지원, 소득세 감면), EU의 공공투자기금 지원, 고용 및 임금상승*에 따른 가계소득 및 소비 증가로 4.0% 성장을 기록하였음.

* 월 최저임금이 2018년 2,100즈워티에서 2019년 2,250즈워티, 2020년 2,600즈워티로 상승

민간소비가 경제성장률에서 차지하는 비중 (%)



정부지출이 경제성장률에서 차지하는 비중 (%)



2020년 예상 경제성장률은 당초 예상치에서 하향 조정

- 당초 2020년 폴란드 경제는 정부의 복지지출 정책, 추가적인 임금 상승 등에 따라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하여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견고한 성장을 시현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코로나19의 국제적 확산으로 인해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예상됨에 따라 주요 경제연구기관들은 당초 예상치에서 2020년 폴란드 경제성장률에서 하향 조정하고 있음.
- 코로나19의 확산 규모 및 장기화 여부에 따라 대내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겠으나, 3월 현재 EIU는 2020년 경제성장률을 3.3%에서 3.1%로, IHS Markit은 3.2%에서 1.3%로 하향 조정하였음.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 및 이에 따른 경기침체로 5년 만에 기준금리 0.5%p 인하

- 폴란드 정부는 소비자물가상승률 목표치를 2.5%(허용한도 $\pm 1.0\%$)에서 관리 중이나 최저임금 상승, 경기 활성화, 재정지출 확대 등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점진적으로 상승하여 2020년 1월에는 목표 관리수준을 초과하는 4.4%를 기록함. 그러나 물가가 2분기 내 관리수준 이내로 억제될 것으로 전망되어 올해 중 금리조정 조치는 없을 것으로 당초 예상되었음.
- 그러나 2019년 말 중국을 시작으로 아시아, 유럽, 미국 등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경기침체가 우려되자, 폴란드 중앙은행은 3월 17일 기준금리를 1%로 0.5%p 인하하였음.
- 폴란드 중앙은행은 금리 인하와 더불어 양적 완화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으며,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3.5%에서 0.5%로 대폭 인하하는 등 유동성 확대를 경기 위축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 또한, 폴란드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대책으로 일자리-기업, 공공의료 서비스-보건체제, 금융 보호를 위해 470억 유로를 투입할 것을 3월 18일 발표하였음. 해당 자금은 코로나19 피해기업 앞 일부 급여 지원 및 대출 제공, 자영업자 앞 자금 지원, 세금 감면 등에 사용될 예정임.

폴란드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자료 : 폴란드 통계청, Fitch Solutions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경 상 수 지	-2,626	-2,451	100	-5,820	2,996
경상수지/GDP	-0.6	-0.5	0.0	-1.0	0.5
상 품 수 지	2,464	3,263	1,539	-5,639	954
상 품 수 출	191,023	196,340	228,046	256,010	263,734
상 품 수 입	188,559	193,077	226,507	261,649	262,780
외 환 보 유 액	89,421	109,503	108,019	110,384	115,823
총 외 채	214,201	229,090	243,209	229,009	228,359
총외채잔액/GDP	44.9	48.6	46.2	39.1	40.4
D.S.R.	13.3	11.8	8.0	7.1	7.5

자료: IMF, EIU

2019년 경상수지는 상품·서비스 수출 증가로 전년대비 개선

- 상품 및 서비스 수출이 폴란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기준 GDP의 51% 수준으로, 자동차, 기계, 운송장비 등 제조업 제품의 수출 확대로 상품수출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서비스 분야 또한 운송·여행·비즈니스 서비스를 중심으로 성장을 지속하여, 운송·비즈니스 서비스 분야의 수출액은 2014~18년 5년간 달러 환산 기준 47% 증가하였음.
- 다만, 자본재(기계·운송장비 등) 및 소비재의 수입수요 증가로 상품수입액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2018년에는 상품수입액이 상품수출액을 초과하여 상품수지가 적자로 전환하였다가, 2019년 다시 수출액(전년대비 3.0%)이 수입액(전년대비 0.4%)보다 큰 폭 증가하여 흑자 전환하였음.
- 2020년 경상수지는 코로나19로 인한 수출수요 감소 및 세계 공급망 위축으로 2019년 대비 불가피하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구체적인 축소 규모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확산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관측됨.

외채상환능력

양호한 외채상환능력 유지

- 폴란드의 2019년 말 외환보유액은 1,158억 달러(GDP의 20.5%)로 3개년 연속 증가하고 있으며, 외채 원리금상환비율(DSR)은 2017년 이후 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어 외채상환능력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분석됨.
- 한편, 2019년 IMF의 공적채무 지속가능성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공적채무 규모는 큰 편이나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현재 폴란드 공적채무 규모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경제성장률, 이자율, 만기연장, 환율변동 충격에 강한 것으로 분석됨.
- 총 공적채무 중 외채 비율은 2015년 57%에서 18년 2분기 49%까지 하락했으며, 정부채무 중 외화표시 채무비율은 약 31%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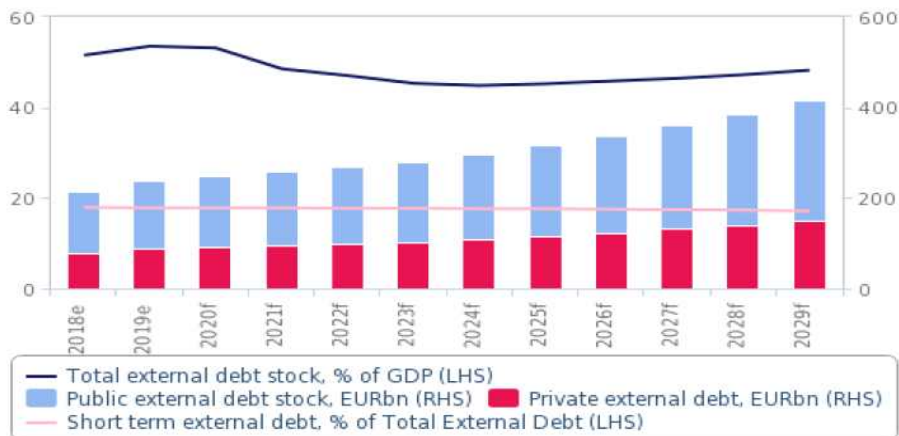
폴란드의 총외채 규모 추이

연도	2015	2016	2017	2018 ^f	2019 ^f	2020 ^e	2021 ^e
총외채(억 달러)	3,300	3,359	3,786	3,780	3,830	3,899	3,988
GDP 대비 비율(%)	69.4	71.7	72.1	68.2	64.6	60.5	57.5

자료 : IMF

- Fitch Solutions에 따르면, 외채의 상당 부분은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따른 결과로, 생산성이 높은 제조업 부문에 투자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수출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폴란드의 견실한 펀더멘털과 우호적인 외부자금조달 환경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도 외채는 안정적인 관리 가능한 것으로 보임.

폴란드 총외채 구성 요소



자료: Fitch Solutions

구조적취약성

EU 시장에 대한 높은 무역 의존도로 EU 경기에 민감한 경제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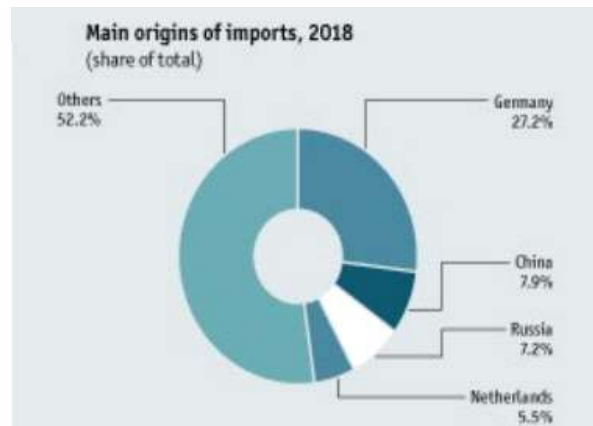
- 2019년 폴란드의 주요 수출상대국은 독일 28.0%, 체코 6.3%, 영국 6.2%, 프랑스 5.5% 순으로 EU 회원국에 대한 수출이 전체 상품 수출액의 80%를 차지하여 EU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EU 경기변동에 민감한 경제구조임.
- 독일은 폴란드의 최대 교역상대국으로, 독일과의 2018년 수출입 규모는 각각 총액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등 독일에 대한 폴란드의 경제의존도가 특히 높음.
- 현재 폴란드는 독일 등 서유럽의 공급망에서 제조업 부문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EU와 미국 간 무역 긴장이 고조될 경우 독일·이탈리아 등 수출지향적 국가들의 공급망과 긴밀히 연계된 폴란드의 수출에도 연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됨.
- 단기적으로는 서유럽 제조업 분야의 허브로서의 역할은 유지하되, 중장기적으로는 R&D, 인적개발, 노동자 재교육, 신기술 개발에 적극 투자하여 수출경쟁력 및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진입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또한, 교역상대국 다변화를 통해 EU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 보다 안정적인 경제구조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2018년 주요 수출국 비중 (%)



자료: EIU

2018년 주요 수입국 비중 (%)



자료: EIU

성장잠재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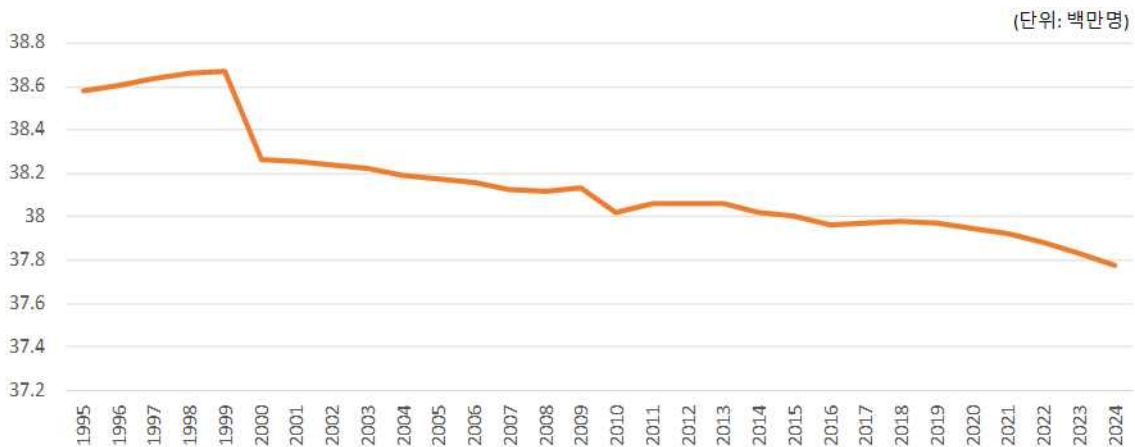
법을 정비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기업투자환경 개선 노력

- 폴란드 정부는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업 친화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고자 복수의 법과 문건에 복잡하게 분산되어 있던 기업활동 관련 법률을 정비하여 비즈니스 헌법을 제정하였음.
- 비즈니스 헌법은 기업법, 외국인·외국기업의 경제활동법, 중소기업 옴부즈맨법 등 기업 활동에 관한 모든 법률을 집합시킨 단일법으로, 2018년 4월 30일 발효되었음.
- 동 법률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은 모든 기업활동을 허용하고 있으며, 법령 해석이 모호한 경우에는 기업인에게 유리하도록 최종 해석하는 등 친기업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음.
- 과거 외국인 투자자는 폴란드에 진출하기 위해 다수의 법령을 조사·검토해야 했으나 비즈니스 헌법 제정 이후에는 법적검토 절차가 간소화됨.
- 한편, 폴란드는 세계은행의 2020년 기업경영여건 종합순위(Ease of Doing Business Ranking)에서 190개국 중 40위를 차지하여, 체코(41위), 슬로바키아(45위), 헝가리(52위) 등 인근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고 있음.
- 그러나 기업경영여건 평가의 세부항목 중 창업 순위는 190개국 중 128위로 하위권에 속하여 창업을 위한 정부 차원의 여건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됨. 참고로 EIU에 따르면 OECD 고소득국에서 영업 개시를 위해서는 평균 9.2일의 시간, 4.9건의 절차, 소득의 3%의 비용이 발생하나, 폴란드의 경우 평균 37일의 시간, 5건의 절차, 소득의 11.6%의 비용이 발생함.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우려

- 폴란드 인구는 저출산과 서유럽 국가로의 인구 유출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1999년부터 꾸준히 감소하여, 노동시장의 노동력 부족과 정부의 재정부담(사회복지지출·연금지급액 증가, 소득세 감소)이 가중되고 있음.

폴란드 연도별 인구수 추이



출처: IMF, 2020년 이후는 예상치

- EU 가입 이후 자국을 떠난 폴란드인은 약 220만 명으로, EU 가입 초기에는 폴란드인의 해외 취업이 실업률 감소*에 기여하였으나, 계속되는 고급인력의 해외유출 및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폴란드의 중장기 경제성장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또한, 2019년 1월 독일의 非EU 국민에 대한 노동시장 개방 등 주변 EU 국가들과의 외국인 노동자 유치 경쟁 심화로 폴란드 거주 외국인 노동자(특히 우크라이나인)들의 대규모 유출 가능성 역시 폴란드 경제성장에 잠재 위험요인이 되고 있음.

* EU통계청에 따르면 실업률은 EU 가입 이전 20% 정도였으나, 2018년 말 기준 5.8%로 크게 하락

- 다만, 단기간 내 인력난은 영국의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에서 자국으로 돌아오는 폴란드인으로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임. IHS Markit에 따르면, 2016~17년 100만 명이 넘는 폴란드인이 영국에서 거주했으나, 2018년 90.5만 명, 2019년 중반에는 82.7만 명으로 감소하였음.

- 한편, 정부는 인구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로드지나 500+ 프로그램*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였으나, 출산 증가 효과는 단기간에 그쳤고, 지원금을 수령하는 출산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오히려 감소하였음.

* 2016년 4월부터 시행된 정부의 대표적 양육 정책으로 둘째 자녀부터 양육비(자녀 1인당 500즈워티)를 지원하였다가 2019년 7월부터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첫째 아이를 포함한 모든 아이로 지원대상을 확대

- 반면, 급속한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연금법 개정에 따른 근로자 정년 단축(2017년에 은퇴 연령을 남녀 67세에서 남자 65세, 여자 60세로 각각 낮춤)은 생산가능노동인구를 더욱 감소시켰음. 이렇듯 현재의 정부 정책은 노동인구 감소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긴요한 것으로 보임.

정책성과

적극적인 복지정책 시행으로 내수 주도의 경제성장 견인

- 현 여당인 법과정의당은 집권 이래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보조금 지원 등 정부 지원을 통한 내수경기 활성화로 폴란드 경제를 견인하고 있음. 대표적인 복지정책은 양육정책인 로드지나 500플러스(500+) 프로그램으로, 출산 장려와 국민생활 개선을 목적으로 정부가 가계 앞 소정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음.
- 2016년 4월부터 시행된 500+ 프로그램의 지급대상자는 둘째 자녀부터로, 자녀 1인당 500즈워티의 양육비를 지원하였다가 2019년 7월부터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첫째 아이를 포함한 모든 아이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음.
- 법과정의당은 2019년 총선에서도 복지정책을 확대하는 정책을 주요 선거 공약으로 내세워 2019년부터 확대·시행 중이며, 2020년에도 가계 실질소득 증가에 따른 내수 주도의 경제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법과정의당의 2019년 총선 주요 공약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도입시기
최저임금 상승	2019년 2,250즈워티에서 2023년 4,000즈워티로 최저임금 점진적 인상	2019년
연금플러스 이니셔티브	퇴직자 및 장애인연금 대상자 앞 연간 1개월치 연금(최소 월간지급액 또는 PLN1,100) 추가 지급	2019년 5월
Family 500+ 지급대상 확대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첫째 아이를 포함한 모든 아이 앞 양육비 500즈워티 지원	2019년 7월
소득세 면제	폴란드인의 해외유출 억제 및 외국인 노동자 유치 목적으로 26세 미만 또는 연 85,528즈워티 미만 급여자 限	2019년 8월
소득세 감면	18%에서 17%로 1%p 인하	2019년 10월
지방 버스 노선 재개	-	-

자료 : IHS Markit

- 그러나 복지정책은 단기적으로 민간소비를 촉진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는 있으나, 무리한 수준의 지속적인 복지정책은 재정부담을 가중시켜 재정건전성을 해칠 가능성이 높음.
- Moody's는 연금플러스 정책에 따른 1개월 치 연금 추가 지급으로 GDP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의 재정적자가 확대될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Fitch Solutions는 2020년 재정적자가 GDP의 2.3%로 확대될 것으로 추산함.

정치동향

여당인 법과정의당의 상원 과반수 의석 확보 실패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국정 유지 전망

- 법과정의당은 2015년부터 집권 여당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親유럽 및 자유주의 성향의 前집권당인 시민연단과 달리 민족주의 및 카톨릭 보수주의적인 성향을 띄고 있음.
- 법과정의당은 2015년 총선에서 상·하원 의석에서 모두 과반수를 차지하며 국정이 집권당을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었으나, 2019년 총선에서 상원 의석의 13석을 상실하며 과반수 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이전 의회 임기만큼 여당 중심의 일방적인 법안 및 정책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IHS Markit, EIU 등 전문리서치기관들은 사법 개혁 및 미디어 규제 등 여·야간 첨예한 대립이 있는 입안 추진은 원활히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였음.
- 그럼에도 법과정의당은 상·하원에서 모두 최다 의석을 유지하고 있어 2024년 총선 전까지는 정치적 안정성이 유지되고, 정부의 적극적인 사회복지 정책 등 주요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폴란드 상·하원 의석 분포

상원 (총 100석)	법과정의당 48, 시민연합(시민연단 주도) 43, 무소속 4, 농민당 3, 좌익연합 2
하원 (총 460석)	법과정의당 235, 시민연합(시민연단 주도) 134, 좌익연합 49, 농민당 30, 우익연맹 11, 독일소수민족대표 1

자료 : IHS Markit

2020년 5월 예정된 대선에서 Duda 대통령은 시민연합 후보와의 접전 끝에 재임 가능 예상

- 폴란드의 차기 대선일은 2020년 5월 10일로, 현재 정당별 후보군은 법과정의당의 Duda 대통령(1회 연임 가능), 시민연합의 Kidawa-Blonska 하원 부의장, 좌익연합의 Biedron 유럽의회 의원, 농민당의 Kosiniak-Kamys 대표, 우익연맹의 Bosak 하원 의원, 무소속 방송인 Holownia 등임.
- 2020년 대선에서 Duda 대통령의 재임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관측되나, 도시 지역에서의 Duda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2019년 총선에서의 법과정의당 지지율 하락 등을 감안할 때 Duda 대통령은 1차 투표에서 당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2차 투표**에서 시민연합의 Kidawa-Blonska 하원 부의장과의 접전 끝에 재선에 성공할 것으로 예측됨.

* 설문 조사 결과 도시 지역 거주 응답자의 18%만이 Duda에게 투표할 의사가 있다고 밝힘

** 1차 투표에서 어떠한 후보도 과반의 투표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 최다 득표자 2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2차 투표 실시

- Politico Europe은 Duda 대통령이 2차 투표에서 53%를 득표할 것으로 예측함.
- 시민연합은 폴란드 주요 도시에서 높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현재 법과정의당 주도의 사법제도 개혁 등의 추진이 중단 또는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

사회동향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정부·여당의 사법개혁 추진으로 인한 사회적 불만 증가

- 법과정의당은 2015년 집권 이후 공산주의 시대의 잔재를 뿌리 뽑겠다는 명목하에 사법개혁을 강행하여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제한하고, 언론을 통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법안을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여당 및 국민과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음.
- 2017년 7월 법과정의당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제한하고 사법부에 대한 법무장관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음. 법안의 주요 내용은 재판관 정년 하향 조정(70세 → 65세), 의회의 판사 임명권 부여, 법무장관 앞 대법관 및 부법원장의 인사권 부여임.
- 이에 5천여 명의 시민은 법과정의당이 반정부 성향의 특정 재판관을 겨냥한 사법개혁안을 추진하여 사법부를 파괴하고 있다고 항의하며 바르샤바 대법원 청사 앞에서 '우리는 게르즈도르프 대법원장 편'이라는 구호로 반정부 촛불시위를 벌인 바 있음.
- 이러한 법과정의당의 일방적인 사법개혁 추진은 2019년 총선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어 정부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증가하고 있음.
- 하원은 정부 개혁을 비판하는 사법부 조치에 대해 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판사징계법안을 2019년 12월 20일 찬성 233 대 반대 205로 통과시켰으나, 법과정의당 의석수가 과반이 되지 않는 상원에서 해당 법안은 48대 51로 2020년 1월 17일 부결되었음. 그럼에도 동 법안은 다시 하원에서 2020년 1월 23일 234대 211로 재통과됨.
- 국민은 이러한 사법제도 개혁은 법과정의당의 정권 유지를 위한 수단이라고 비난하며 대규모 시위를 진행하였음. 한편, 폴란드 대법원은 2020년 1월 23일 대법관 총회를 개최하여, 정부의 사법 개혁안은 법관의 독립성을 심각히 저해하고 있으며, 2017년 이후 新국가사법위원회(KRS)가 임명한 판관의 판결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음.
- 그럼에도 Duda 대통령은 정부 방침에 어긋나는 판결을 한 판사에 대한 징계 또는 해임 권한, 대통령의 판사 임명에 대한 판사의 이의 제기 불가, 사법부의 자치권 및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2020년 2월 4일 재가하는 등 법과정의당 임기 중 사법 개혁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한편, 2020년 2월 4일 대법원 판사 징계위원회*는 파베 유슈치쉬 판사가 정략적 법관 지명을 항의했다는 이유로 정직과 임금 40% 삭감을 결정한 바 있음. 해당 판사는 폴란드 정부의 사법제도 개편이 법원의 정치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인물임.

* 사법제도 개편 과정에서 판사들의 반발을 제어하려고 설치한 기구

국제관계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사법개혁 추진으로 EU와의 갈등 고조

- 법과정의당은 EU 국가들과의 공조보다는 주권을 강조하는 성향을 지닌 정당으로, 2015년 법과정의당 집권 이래 폴란드와 EU와의 관계가 경색되었으며 가시적인 관계개선은 집권당의 임기가 끝나는 2024년 까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EU와의 관계 악화의 주된 원인은 법과정의당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으로, EU는 폴란드 정부의 독단적인 사법개혁 조치가 EU의 주요 가치인 법치주의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시키는 행위라며 강력히 비난하고 있음.

* EU 회원국의 법원은 체포영장부터 아동 양육권, 상업 문제까지 제반 사안에 대해 다른 회원국 법원의 판결을 동일체처럼 인정하고 있음.

- EU 집행위원회는 2017년 7월 시행된 폴란드의 사법개혁에 대해 EU조약 제7조를 근거로 2017년 12월 폴란드에 대한 제재를 개시하였고, 2018년 6월에는 EU 역사상 최초로 EU 일반이사회에서 사법개혁 관련 폴란드 정부의 입장을 듣는 청문회가 개최되기도 하였음.
- 그럼에도 폴란드 사법개혁 법안(대법원 개정법)이 2018년 4월 3일 발효됨에 따라, EU 집행위는 2018년 7월 EU법 위반(EU조약 제19조1항, EU기본권 헌장 제47조)에 따른 제재 절차(EU 사법재판소 제소를 위한 사전단계)를 개시한다고 밝혔으며, 2018년 9월에는 EU 사법재판소* 앞 제소를 결정함. 이후 폴란드 의회는 2018년 10월 EU 사법재판소의 잠정조치 이행을 위해 대법원 개정법을 추가 개정한 바 있음.

* EU 조약 및 제반 법률의 해석과 그 적용에 대한 판결을 통하여 EU법의 이행을 최종적으로 보장

- 이후에도 EU 집행위원회는 대법원 개정법 중 법관징계부 신설 내용이 여전히 법관들의 독립성과 사법권 독립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2019년 4월 EU법 위반에 따른 2차 제재 절차를 개시, 2019년 10월 EU법 위반으로 EU 사법재판소에 제소한 바 있음. 이후 EU 집행위원회는 2020년 1월 대법원 징계부 활동을 중단하는 잠정조치를 EU 사법재판소에 요청할 것을 결정하였음.
- 또한, 2019년 12월 폴란드 하원이 판사징계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도 EU는 크게 반발하였으며, 2020년 1월 바르샤바에서는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EU 회원국 판사와 변호사 약 15,000명이 모여 정부의 사법개혁안에 항의하는 집회에 개최하였음.
- EU는 2월 파베 유슈치쉬 판사 징계건에 대해서도 EU 회원국으로서 EU법 체계를 따르는 폴란드에서 EU 법률을 적용한 판사를 정부가 정치적으로 탄압한 사건이라 평가하며 항의한 바 있음.

반러·친미 외교 노선 유지

- 폴란드는 과거 자국을 강제 병합하여 억압한 데 이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공산화한 러시아와 오랜 앙숙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냉전 종식 후에도 푸틴 대통령 치하의 러시아가 서유럽의 안보를 위협하는 태도를 견지함에 따라 러시아에 대한 경계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음. 특히, 2014년 크림 반도를 둘러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갈등* 이후 폴란드는 EU의 대러 제재에 적극 동참하였으며 양국 관계가 급격히 경색되었음.

*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에 속한 크림 반도를 병합하였으나, 국제사회는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음

- 한편, 법과정의당은 2010년 발생했던 대통령 특별기 스몰렌스크 추락 사고* 배후에 러시아와 자국 내 반대파의 음모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고 2015년 집권 이후 재조사를 착수하였음. 이후 2018년 1월 폴란드 정부 조사위원회는 사고 원인을 여객기의 왼쪽 날개의 내부 폭발 때문이라고 공식 발표한 바 있음.

* 2010년 4월 10일 레흐 카친스키 폴란드 대통령 등이 카틴 숲 학살(2차 대전 중 소련군에 의한 폴란드 군 장교 등 엘리트 인사들의 학살) 70주년 추모식 참석을 위해 러시아 스몰렌스크로 향하던 중 스몰렌스크 공항 활주로 부근에서 추락하여 대통령을 포함한 탑승자 96명이 전원 사망한 사건

- 아울러 러시아로부터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고,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군사 및 에너지 안보를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다만, 폴란드 정부는 자국 내에 영구적 미군 기지 건설을 희망하고 있으나 NATO-러시아 기본협정 위반 가능성, 미군 기지 건설에 대한 러시아의 반발 등으로 미군 기지 건설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으로, 미군의 상시 주둔병력이 증원되는 수준에서 군사적 협력이 당분간 강화될 것으로 보임.

외채상환태도

외채상환태도 비교적 양호

- 폴란드 정부는 1991년 파리 클럽에서 당시 외채의 약 50%를 탕감받고, 2014년까지 채무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채무재조정을 받았으나, 2009년 조기상환 후 현재 파리클럽 채무 잔액은 없음. 이후, 채무 재조정 경험은 없으며, 외채상환태도가 우수함.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평가제외(고소득국)	평가제외(고소득국)
Moody's	A2 (2019.10)	A2 (2019.04)
Fitch	A- (2019.10)	A- (2019.03)

견실한 경제지표에 따른 국제신용평가 등급 양호

- Moody's는 약 30년간 지속된 경제성장, 경제규모 및 국가경쟁력, 안정적인 거시경제 체계, 금융 부문의 안정성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폴란드에 대하여 A2 등급을 유지하였음. 그러나 비교적 높은 재정적자 규모, 2019년 선거 공약 이행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적자 규모 확대 가능성, 인구(노동력) 감소, EU 기금 지원 규모 축소 가시화, 경제정책의 불확실성 증가 등을 중장기 위험요인으로 꼽음.
- Fitch 역시 다변화된 경제, EU 회원국 지위, 견실한 경제기반, 안정적인 금융 부문에 기반한 정책 추진 등을 고려하여 폴란드에 대하여 A-등급을 유지하였음. 그러나 비교군(동일등급 부여국)에 비해 높은 순외채규모·정부부채와 낮은 거버넌스를 폴란드 경제의 취약점으로 평가함.

- 폴란드 경제는 EU 역내 교역 확대, EU 기금 지원, 정부 주도의 내수시장 부양으로 28년 연속 플러스 경제성장을 시현 중이며, 유럽의 제조업 생산기지 역할에 따라 EU 내 수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한편, 국제신용평가사 등은 다변화된 경제구조로 폴란드의 경제기반이 견실한 것으로 평가함.
- 2019년 경제성장률은 정부의 복지정책, 민간소비 증가 등 내수시장 활성화에 힘입어 4%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다만, 저출산과 해외취업자 증가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노동 공급 부족은 폴란드 중장기 경제성장의 잠재 위험요인임. 또한, 양육비 지원, 소득세 면제·감면, 연금 지급 확대 등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무리한 복지정책은 재정건전성을 해칠 가능성이 높음.
- 법과정의당은 2015년부터 집권 여당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하원에서 모두 최다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정치적 안정성은 의회 임기가 끝나는 2024년까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단, 상원에서의 과반수 의석 확보 실패로 이전 임기에서와 같은 법과정의당의 독단적인 법안 및 정책 추진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금년 5월 예정인 대선 결과도 현 정권의 정책 달성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됨.
-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법과정의당의 사법개혁 추진으로 EU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으나, 법과정의당 임기 만료인 2024년까지 가시적인 관계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폴란드의 2019년 말 외환보유액은 1,158억 달러로 3개년 연속 증가하고 있으며,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7.5%로 외채상환능력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